

무등산 케이블카 “접근성 향상” vs “원형보전” 팽팽

설악산 본궤도로 다시 수면위

찬성 측 “쇼핑몰과 관광 시너지 확대”
반대 측 “국립공원 10년... 다시 퇴행”
다양한 시민의견 수렴 절충안 마련 등
광주시·의회 건설적 공론장 형성 필요

설악산국립공원 케이블카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가운데 무등산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케이블카 찬반 논쟁은 무등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찬성 측 입장과, 국립공원의 생태학적 다양성을 원형 그대로 보전해야 한다는 반대 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무등산 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입장은 접근성 향상과 광주 관광 활성화를 주장하고 있다. 배후전 광주시민회의 대표는 “장애인, 노약자 등이 무등산을 자유롭게 오를 수 있도록 무등산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논리는 당연한 이야기이고, 광주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무등산 케이블카는 꼭 필요하다”며 “광주에 복합쇼핑몰이 들어선다면, 무등산과 관광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관광객을 유입시키기 위해서는 관광 인프라 연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접근성을 높이고 환경 파괴에 대한 위협성을 낮추는 최선의 대안이 케이블카라고 강조했다. 배 대표는 “지금까지 케이블카에 대한 논쟁은 환경단체의 반대로 인해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못했다”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수조트램, 전기차 활용 등의 변형된 방법이 오히려 검증되지 않은 방법론인 만큼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 효과보다 환경 파괴에 대한 위험성만 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 10년 동안 생태다양성이 잘 보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무등산케이블카는 이같은 발전을 역행시키는 퇴행적 논쟁이라는 입장도 존재한다. 이경희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무등산 정상을 빠르게 올라가야 한다는 기존 관점에 대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정상에 접근성을 높인다고 하는 관점은 당초의 국립공원을 지정한 목적과는 위배되는 상황이다. 산 정상을 관광적인 측면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국립공원 지정 취지, 기본 원칙과는 정면 배치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면서 “무등산국립공원 지정의 가장 큰 성과는 국내 탐방객이 많이 늘었다는 것이

아니다”며 “무등산은 10년동안 야생 동식물의 개체수가 많이 늘었다. 무등산 정상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지금까지의 발전을 역행하는 일이다”고 강조했다.

강은미 정의당 의원도 최근 환경부의 정책들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무등산의 생태 환경 보전 필요성에 대한 시민 공감대 확산을 호소했다.

강 의원은 “환경부는 기본적으로는 환경을 보호해야 하는 법적 절차 수행에 대한 의무가 있지만 흑산공항과 설악산케이블카 등을 보면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환경적인 절차가 잘 수행되지 못했을 경우 4대강 사업처럼 원상복구하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민들은 인간이 자연을 활용하는데 시민단체가 방해한다고 하지만 나중에는 광주의 푸른길처럼 환경을 보전해 다행이라고 말할 것이다”며 “실제로 한국은 국토에서 지정한 보호지역이 전세계와 비교하면 매우 낮다. 다른 국립공원은 정상부에 있는 시설도 철거하는 상황에서 정상부에 새로운 시설을 만드는 케이블카 설치하는 이 같은 흐름과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광주시민들 중심으로 무등산케이블카 설치를 찬성하는 여론은 여전히 우세하다. 지난해 4월 본보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무등산국립공원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케이블카를 설치하자는 의견에 시민 57.7%가 찬성했고 반대하는 의견은 38.8%였다.

다만, 무등산 케이블카 논쟁이 재점화된 만큼 지역 정치권이 여러 시민들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고려, 절충안을 찾기 위한 노력이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 무등산케이블카에 대한 논쟁은 지금까지 찬반 논쟁에 휘말려 건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되지 못해 적정위치, 노선, 무등산 훼손에 대한 대책, 대규모 사업비 마련 등 여러 구체적 현안들이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다.

이명노 광주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의원은 “설악산케이블카의 사업 진행 방향에 따라 무등산케이블카도 영향을 받고 있어 시가상 지금이 공론화의 적기로 보인다”며 “무등산케이블카 설치에 따른 환경 훼손에 대한 연구도 더욱 적극적으로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도 현안들을 공유하고 해법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 및 끝장토론회를 계획하겠다”고 말했다. **최항지 기자 hwangji.choi@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 유제철 환경부 차관, 송형근 국립공원공단 이사장, 정선화 영산강유역환경청장 등이 지난 4일 국립공원 지정 10주년을 맞아 무등산 정상 개방 행사가 열린 지왕봉앞에서 제14회 광주비엔날레의 성공 개최를 응원하고 있다. 김양배 기자

‘어머니의 산’ 무등산 생태·지질가치 커졌다

국립공원 지정 10년·지질공원 재인증

‘어머니의 산’으로 불리는 무등산의 생태적·지질적 가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국립공원 지정 10년이 지나면서 ‘생태보고’로 자리잡은데다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으로 생태적 가치와 함께 지질학적 관점에서도 세계적인 가치를 공인받았다는 평가다.

무등산은 광주도심과 불과 5~6km 거리에 위치해 매년 300만명 안팎의 탐방객이 찾을 만큼, 뛰어난 접근성 탓에 훼손이 우려돼 왔다.

하지만 무등산은 지난 2013년 3월 국내 21번째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뒤 국립공원 지정 이전보다 오히려 생태계 보전 가치가 더 높아졌다는 평가다.

1972년 5월 도립공원 지정 40여 년 만에 국립공원 승격에 국립공원공단과 광주시, 화순·담양군은 이후 서로 협력하면

서 생태계 보호, 훼손지역 복원, 무등산 자락의 문화공동체 형성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생태보전 노력에 무등산은 ‘생태계 보고’로 거듭났다. 멸종위기종 10종을 포함해 2300여 종의 생물자원이 서식하던 무등산은 그동안 멸종위기종 29종 등 4100여 종의 동·식물이 사는 ‘생태계 보고’로 자리매김했다. 천연기념물도 9종에서 11종으로 늘었다.

정상부 주상절리대와 화순 공동 화석지, 적벽 등은 2018년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지난 24일 재인증 절차를 통과해 2026년까지 그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유네스코는 무등산권 세계지질공원은 2018년 최초 인증 당시 제시했던 권고사항을 지난 4년간 충실히 이행했고, 특히 무등산이라는 하나의 지질유산을 둘러싼 광주·전남·담양·화순 4개 지자체가 지질공원 운영에 공동 협력한 점을 가장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리 고향 살리기 위한 협력과 소통의 장

제1회 호남 고향사랑기부 페스티벌

[전국 8도 고향사랑 페스티벌]

2023년 6월 30일(금) ~ 7월 2일(일) 수원컨벤션센터

주최 전남일보 주관 (주)한국전시산업원